

ILO 모형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재정모형 개발

Methodological Extensions of ILO Social Budget Model in the case of Korea



신혜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제도도입 초기인 관계로 현재 사회보장지출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최근의 고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연금제도, 의료비 등의 급격한 지출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도입된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출 및 수입규모 등의 총괄적인 재정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적인 재정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ILO의 사회보장 재정모형(ILO Social Budget Model)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적인 재정추이를 전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1. 모형개발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¹⁾ 및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제도도입 초반이라 현재 사회보장지출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최근의 고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연금제도, 의료비 등의 급격한 지출증가가 예상되므로 이

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도입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출 및 수입규모 등의 총괄적인 재정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향후 재정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ILO의 사회보장 재정모형(ILO Social Budget Model)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추이를 전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때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즉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연금제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를 추가한다.

ILO의 사회보장 재정모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국가별로 사회보장제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측은 물론 인구·경제·제도적 변수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수입 및 지출 등의 재정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모형으로, 각각의 제도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별로 중장기 재정전망을 시행하고 있는데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적어도 5년마다 공식적으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장기재정전망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각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국방부 등에서 장기재정전망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건강보험제도, 산재 및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도 각각 관련부처나 공단 등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때 인구변수, 노동시장 및 거시경제변수 등에 대하여 각각의 담당기관 및 연구자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가정 하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재정전망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ILO 사회보장 재정모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데 ILO 모형의 경우 동일하

게 적용되는 인구 및 경제변수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각각의 제도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적인 재정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즉 각각의 모형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가정 하에서 사회보장지출흐름을 예측하여 재정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향후 세부적으로 제도별 재정흐름 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재정수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한편 ILO 모형을 활용할 경우 각 제도별로 이에 적합한 입력자료와 가정변수 뿐만 아니라 제도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론(methodology) 측면에서의 모형화(modeling) 과정이 필수적이다. 즉 기존모형은 외형적인 틀만 갖추어져 있을 뿐 모형내부의 방법론적으로는 사용자(user)가 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재정전망에 있어서 ILO 모형을 활용할 경우에도 기초자료와 가정변수 생성 및 입력작업은 물론 각각의 제도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제도별로 예측방법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모형에 있어서 각각의 제도를 반영하여 장기적인 재정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하 본문에서는 산재보험으로 한다.

2. ILO의 사회보장 재정모형 소개

ILO 사회보장 재정모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향후 수입과 지출 등의 재정상태를 장기간에 걸쳐서 전망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정책결정 및 증장기에 걸친 재정계획 수립과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ILO 사회보장 재정모형은 국가경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대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각종 사회보장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 보다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 관리 및 모니터링을 책임지는 정책 담당자나 연구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ILO 사회보장 재정모형은 ILO FACTS (Financial, Actuarial and Statistics Branch)에서 개발한 ILO 모형군(model family) 중 한 부분이다. ILO 모형군은 일반적인 조세 및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공지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사회정책 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국가재정 계획수립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제공한다.

ILO 모형군은 크게 사회보장 재정모형과 정부지출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는 것은 예산모형에서 다루고 있다. 그 밖에 인구모형과 노동공급모형은 각각 인구수, 경제활동인구수 등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모

형이고 경제모형은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의 경제변수를 자체적으로 추계하는 모형이다. 이들 모형은 사회보장 재정모형과 정부지출모형에 필요한 입력변수 및 가정변수를 생성하는 부과적인 모형(auxiliary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보장 재정모형은 연금모형과 보건의료모형, 기타 사회보장제도관련 모형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모형은 방법론 측면에서 국가별 제도내용에 따라 변경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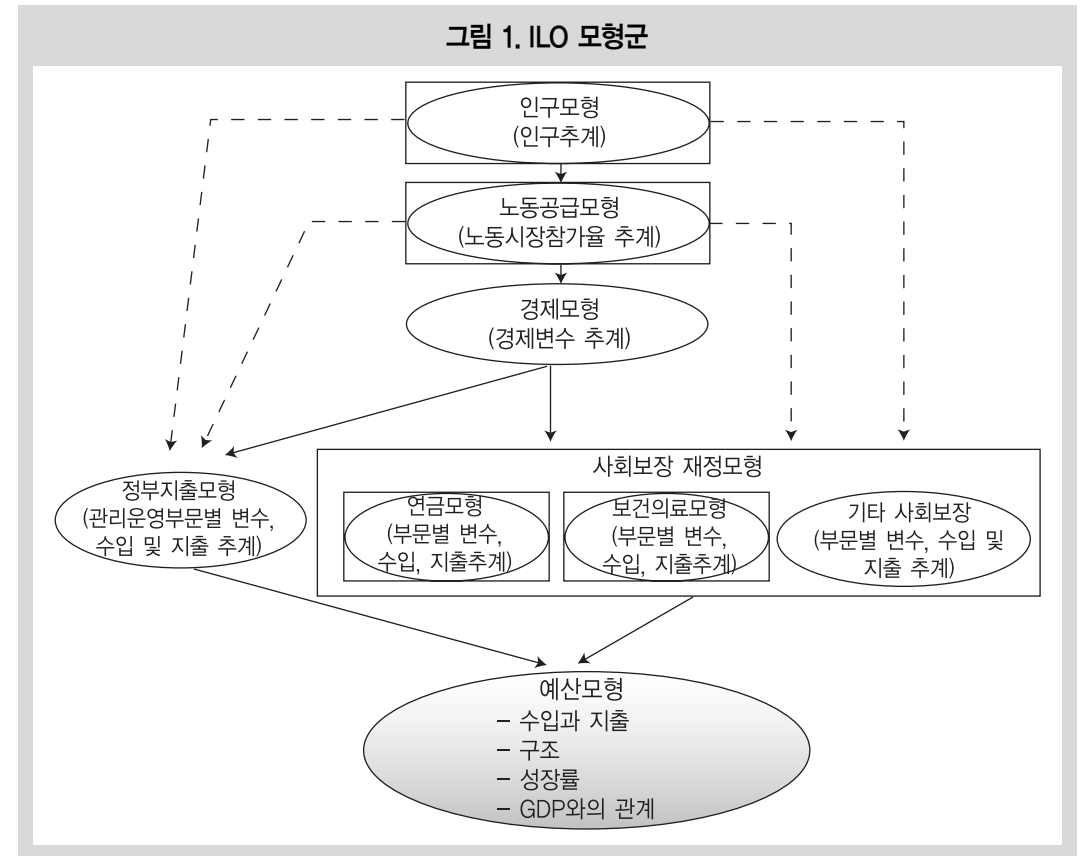
이와 같이 ILO 사회보장 재정모형은 ILO 모형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인구모형, 노동공급모형 및 경제모형으로부터 필요한 가정변수를 동일하게 입력받아 수입 및 지출을 전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ILO 모형군 중에서도 특히 ILO 사회보장재정모형을 중점적으로 확장 및 개발하고자 하는데 본고에서는 연금부, 보건의료부 등 각각의 사회보장제도별로 모형화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모형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공적연금, 퇴직연금, 보건의료와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의 모형

2) 예를 들어 주거, 아동과 부녀자 수당제도 및 공공부조 등의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화 과정을 방법론측면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³⁾

1) 공적연금 재정모형

공적연금 재정 모형은 연금수리적 모형(actuarial model)으로 각 제도별로 상세한 내용까지 반영할 수 있는데, 즉 가입자가 연금제도에 가입하여 근로기간동안 기여하고 은퇴 후 연

금수급을 시작하여 수급을 마감하는 전 과정을 각 제도내용에 맞추어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연도별로 수입과 지출부분 등의 장기간에 걸친 재정흐름을 예측(projection)할 수 있다.

먼저 수입부분 중 보험료수입은 장래 가입자수와 이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부과대상소득을 예측하고 이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출부분은 은퇴·사망·장애 등의

3) 한편 각 모형별로 필요한 가정변수 및 제반 기초율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고자 한다.(자세한 내용은 윤석명·신화연(2006), 「한국의 사회보장예산모형 개발 -ILO Social Budget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참조)

수급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지출에 대한 것으로 먼저 수급자수를 산출하고 급여수준은 가입기간과 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는데, 최초수급이후 지속적으로 급여가 지급될 경우⁴⁾ 급여액은 각 제도별로 물가나 가입자의 임금수준에 의해 해마다 조정한다.

이와 같이 산출된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액만큼을 수지차로 하는데 이 때 기금이 있으면 전년도 기금에 수지차를 누적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제도별로 재정수지상태를 점검하여 수지차만큼 발생될 국가보전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⁵⁾

한편 기금이 있는 경우 재정수입항목 중 보험료수입 이외에 이로 인한 운용수익이 추가되어 있다.

기존 ILO 모형은 각각의 공적연금제도를 동일한 하부모형(module)에서 전망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각각의 제도별로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므로 가입자와 소득수준, 급여수급조건 및 급여수준 등 각각의 제도내용에 알맞게 각각의 모형을 새로이 개발 및 보완한다.

모형화 과정 중 가장 염두에 둔 부분은 각 제도별로 복잡한 수급조건을 반영하는 부문에 대

한 방법론 개발로, 이 중에서도 최초 수급자수 및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근로기간 중 또는 제도 가입기간 중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여기간에 대한 예측방법론이다.

가입기간은 가입자와 수급자의 가장 기본적인 연결고리로, 해마다 은퇴·장애·사망 등의 상태변화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수급조건 중 하인 가입기간을 동태적(dynamic)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수지역연금의 경우 퇴직률과 신규가입률 등에 따라 가입기간을 결정하고 국민연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퇴직률, 신규가입률 등을 반영하고 그밖에 가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납부예외가 가능하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반영한다.

한편 공적연금 재정전망을 위해서 ILO 모형군의 다른 모형으로부터 산출되는 몇몇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가입자수 산출에 필요한 입력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인구모형으로 부터는 인구수, 노동공급모형으로부터는 경제활동참가자수와 실업자수를 받아들여서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특수지역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노동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변수가 주된 요인이 되므로 향후 30년, 40년 후에는 가입자규모를 일정수준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수급자수는 각 제도별로 예측한 가입자수에

퇴직률 등을 적용하여 신규수급자수를 산출하고 전년도 수급자수에 인구모형으로부터 입력 받은 사망률을 반영하여 매년 수급자수 규모를 예측한다.

또한 보험료 부과대상소득과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투자수익률 등의 경제변수가정은 경제 모형으로부터 입력받는다.

2) 보건의료 재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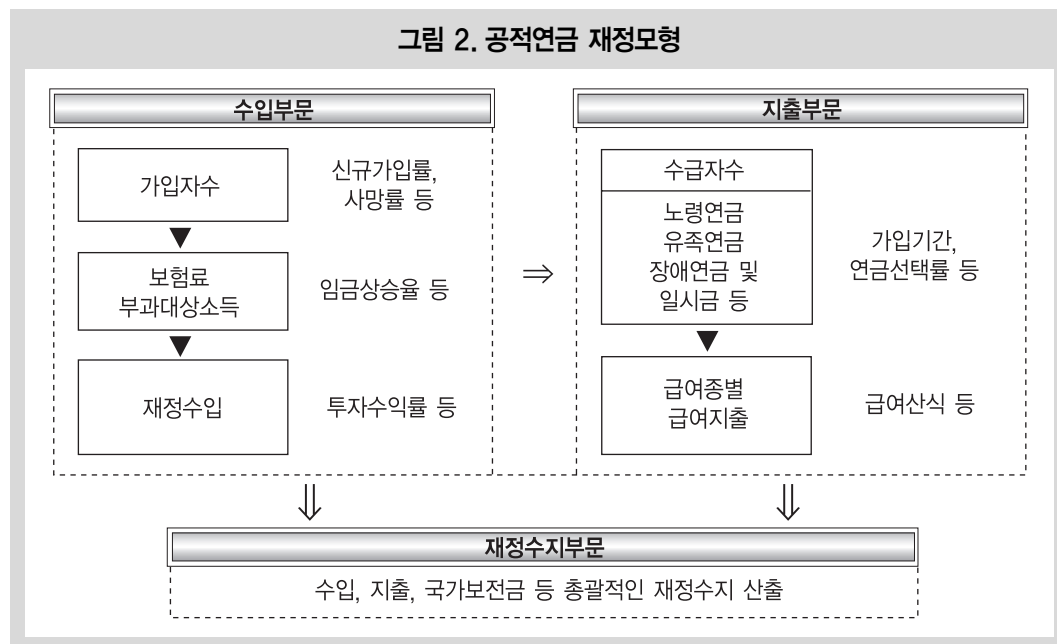
보건의료 재정모형 중 수입부문은 보험료수입과 국고지원, 지출부문은 진료비지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수입부문 중 보험료수입은 의료보장인구 즉 전국민 중 의료급여인구를 제외한 보험료적용인구수에 1인당 보험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한편 진료비지출은 급여부문과 비급여부문에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1인당 진료비를 적용하여 급여부문과 비급여부문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재정지출을 산출한다.

기존의 ILO 보건의료 재정모형을 활용할 경우 필요한 기초성격의 각종 요인(factor)을 산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자료의 부족으로⁶⁾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재정수입 및 지출전망에 대해서는 모형을 새롭게 개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보건의료비 전망은 통

그림 2. 공적연금 재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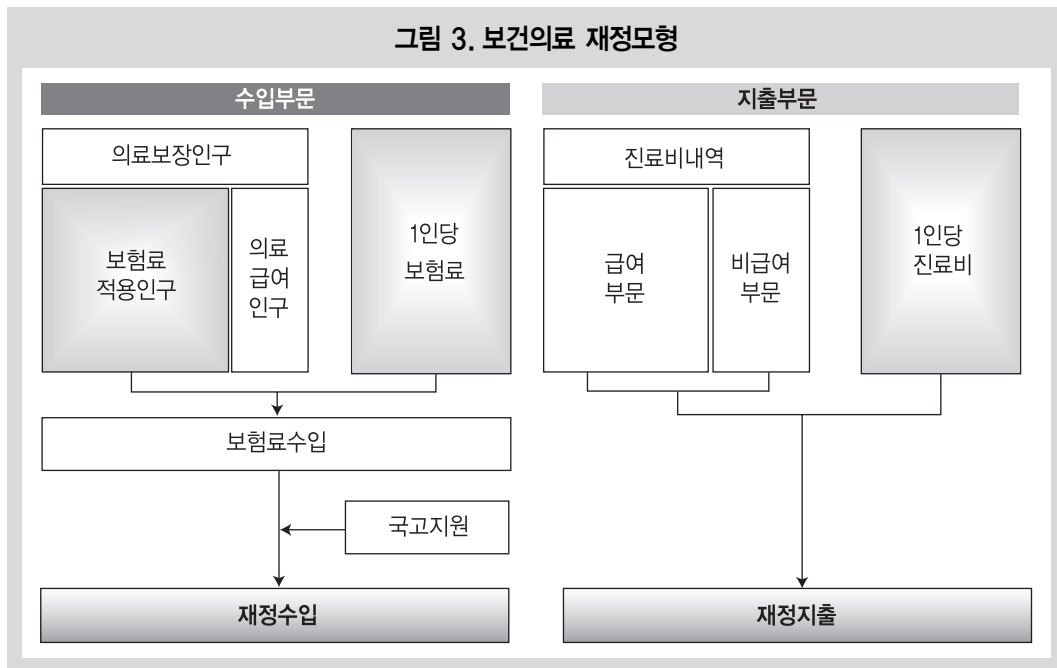


4) 수급자 중 사망하거나 각 제도별로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예: 유족연금이나 은퇴 후 소득활동재개 등) 급여지급이 중단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5) 실제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국가보전금이 매년 증가하여 2008년도 예산에는 약 2조 2천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6) 기존의 ILO 보건의료모형에서는 외래환자수, 병상수, 의료종사자수 등과 함께 외래환자 1명당 혹은 외래진료 1건당 진료비와 의료진수 등의 요인별 기초자료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를 입력자료로 하여 의료비지출을 전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자료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3. 보건의료 재정모형



상 향후 3~5년 동안의 수입·지출 규모를 예측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제도 속성상 연금보험과 달리 단기 속성의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장기 추계에 대한 정책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추계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변수를 보다 정밀하게 재정추계모형에 내생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전망을 시도함에 있어서 제도내용을 세밀하게 반영하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수입부문 중 의료보장인구는 총인구수로 가정하고 이 중 의료급여인구는 총인구수의 3~5%로 하여 이를 제외한 자를 보험료 적용인구수로 가정한다. 1인당 보험료의 경우 직장파 지역가입자를 각각 구별하여 산출하나 향후 전

망에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직장과 지역가입자 각각의 보험료율 수준을 향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국고지원의 경우 현재의 약 4조원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보험료수입과 국고지원금을 합산하여 재정수입을 산정한다.

지출부문 중 1인당 진료비는 급여비와 비급여비로 구분하고 있는데 급여비는 건강보험제도에서 공단과 본인이 각각 부담하는 의료비지출을 뜻하고 비급여비는 그 밖에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문의 의료비를 포함하고 있다.

급여비의 장기추세는 건강보험관련 실적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후의 인구구조변화 즉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의료비 증가 등을 반영한다.

비급여비⁷⁾는 향후 정책변수가 장기적인 추세

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현황과 약도 제도로 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이를 전망하는데 있어서⁸⁾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편 총인구수와 경제활동참가율, 경제변수 등은 각각 인구모형, 노동공급모형, 경제모형에서 입력받고 그밖에 보건의료 재정전망에서만 사용되는 기초율은 다른 모형과 독립적으로 보건의료 모형내에서 내생변수로 한다.

3) 퇴직연금 재정모형

퇴직연금 재정모형을 수입부문과 지출부문으로 나뉘어서 살펴보면 먼저 수입부문은 경제활동참가자의 사업장 근로자⁹⁾ 중 퇴직연금 전환율을 반영하여 퇴직연금 가입자 규모를 산출하고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월평균임금을 퇴직연금 기여액을 반영하여 총기여액을 구한다.¹⁰⁾ 이렇게 산출된 퇴직연금의 총기여액을 적립한 기금에는 투자수익률을 적용하여 퇴직시 수급자에게 지급할 누적적립금 규모를 산출한다.¹¹⁾

퇴직연금 수급자수는 퇴직연금 대상자 중 일정수급연령에 도달하면¹²⁾ 퇴직연금 및 일시금

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퇴직연금의 총적립금은 매년 퇴직연금 수입과 지출의 수치를 전년도 총적립금에 누적하여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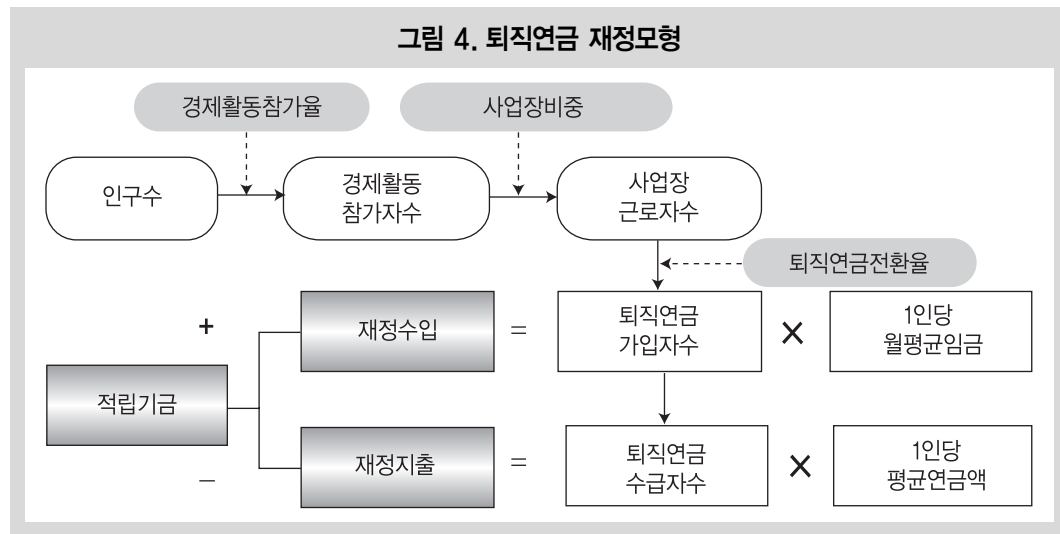
2005년 말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에 대한 재정전망은 시행된 지 2년도 채되지 않아 퇴직연금 가입자수나 수급자 규모 등에 대한 향후의 변화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실적자료가 거의 없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인 재정전망은 상당부분 무리한 가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정 중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는 퇴직금 가입자 중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자의 비중 즉, 퇴직연금 전환률에 대한 가정과 이들이 가입할 퇴직연금의 형태이다.

먼저 퇴직연금 가입자수에 적용되는 퇴직연금 전환률에 대한 가정은 제도도입 초반 20%부터 매년 5%씩 증가하여 2017년 70%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¹³⁾ 한편 이들이 구매하는 퇴직연금의 상품

형태는 모두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으로 가정하고 근로기간에 약 8.3%의 보험료를

7) 비급여비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급여비의 일정수준(약 20%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8) 비급여부문은 현황파악도 제도로 되어 있지 않으나, 건강보험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환자만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민간영역의 의료비지출에 대한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
 9) 현재 적용 사업장은 5인 이상이나 2010년 이내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10) 퇴직연금의 기여액 산정을 위해서 종전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무시 한달치 임금을 기여수준으로 가정하여 월평균 임금을 연도별 퇴직연금 기여액으로 산정한다.
 11) 퇴직연금 적립금 산출 시 중간정산 등 조기인출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2) 수급연령은 60세로 하고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가정한다.(국민연금제도의 수급연령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13) 고광수·김근수·김재철(2005), 「인구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가계의 주식보유와 3층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금융연구 제19권 별책, 61~128.



납부하고 이들의 운용수익을 합산한 누적적립금을 은퇴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퇴직연금 재정모형은 이러한 가정 하에서 개발한 것으로 향후 가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 수정 및 개선해야 할 것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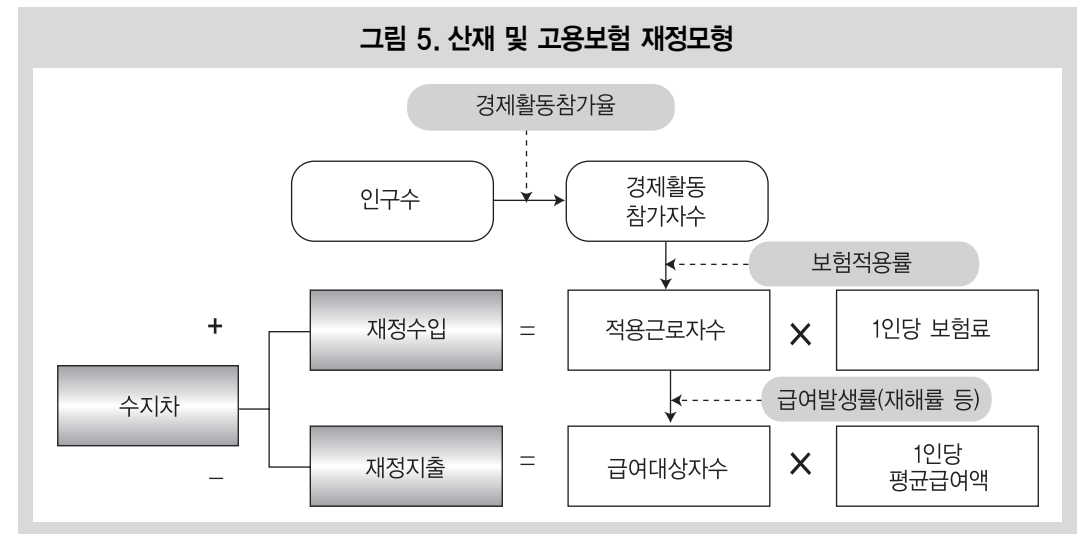
한편 퇴직연금 재정모형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자료에는 노동공급모형에서 경제활동참가자수와 경제모형으로부터 경제변수가 있고, 퇴직연금전환율의 경우 모형자체 내에서 반영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4)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재정모형

수입부문에서는 적용근로자수와 1인당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적용근로자수는 경제활동참가자수 중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수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각각의 적용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와 같이 산출된 적용근로자의 평균소득에 각각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1인당 평균보험료를 반영하여 매년 재정수입을 정한다.

지출부문은 적용근로자수에 산업재해율 등 급여발생률을 적용하여 급여대상자수를 산출하고 이들의 1인당 평균급여액을 반영하여 재정지출을 결정한다.

14) 예를 들어 현재 모형으로는 확정급여(defined benefit)나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경우 모형수정이 불가피하다.



산재 및 고용보험의 경우 기존 ILO 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새로이 개발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자수 산출시 반영하는 적용률은 2000년~2005년의 평균적용률을 각각 적용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약 47%, 고용보험의 경우 약 36%를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이들에게 적용하는 각각의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먼저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자들의 평균임금에 2006년 공시된 전업종 평균보험료율 1.78%를, 고용보험도 각 사업별 총보험료율 1.396%¹⁵⁾로 향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산재 보험의 급여발생률인 산업재해율에 대한 가정은 실적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0.75%에서 2030년 0.27%까지 감소하고 이후에는 이 수준을 유지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산재보험의 1인당 평균급여액 산출시 장기성 급여와 단기성 급여를 구분하고 있는데¹⁶⁾ 장기성 급여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약 23%씩 증가하도록 하고 향후 제도가 성숙된 이후에는 점차 그 증가율이 감소하여 2050년 이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기성 급여의 경우 실적자료에 따라 최근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초반에는 약 9%씩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50년 이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최근 현금보상 위주로 운영되던 기존의 산재 보험제도에 재활부문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선해

15) 실업급여사업 0.9%, 고용안정사업 0.15%, 직업능력개발사업 0.346%의 각 사업별 보험료율을 합산한 보험료율이다.

16) 장기성 급여에는 장애·유족·상병보상 연금, 간병급여 등을, 단기성 급여는 요양·휴양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야 할 것이다.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과 달리 1995년에 시행된 고용보험의 경우 최근까지 적용대상 및 급여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위한 실적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당해연도 급여지출규모는 전년도 총 급여지출액에 과거 3~4년간의 급여지출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향후 제도가 정착된다면 보다 풍부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수 추이와 평균급여액 등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재정모형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변수 등의 자료를 각각 노동공급모형과 경제모형에서 입력받는다.

4.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모형의 향후과제

ILO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사회보장 재정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향후의 재정상태를 미리 점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

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장래 예상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및 예기치 못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발된 모형의 전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현재는 그 지출규모가 낮으나 향후 제도확대 및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지출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⁷⁾ 따라서 향후 논의의 초점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제도 유지 및 지속가능성이 주된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므로 재정모형을 통해 향후 새로운 방향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개발된 모형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향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공부조와 민간부문의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모형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사회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별로 각각의 지출규모를 전망 및 재정분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본
문
서

17) 자세한 재정전망결과는 윤석명·신화연(2006), 「한국의 사회보장예산모형 개발 -ILO Social Budget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참조.